

## 대한민국 능력주의의 뿌리

김호

능력에 따른 대우야말로 공평하다는 생각은 오랜 시간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식이었고, 조선은 기본적으로는 신분제 사회이면서도 그래도 능력 있는 자들이 과거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정약용은 조선후기 사회의 쇠퇴야말로 공평한 업적 평가에 따른 운영이 결여되어 능력도 없는 이들이 부와 귀를 세습하기 때문에 점차 공정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요순시대’의 이상을 회복하려면 능력과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적 고증’을 시도했다. 이른바 다산의 평생 학문은 능력주의 사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 주요 논의내용

-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 부(富)와 귀(貴)의 공평한 분배
- ‘능력주의’라는 오래된 현실

다산은 능력이 없다면, 즉 백성의 삶을 안정시킬만한 자질이 부족하다면 비록 조선의 왕이라도 그 ‘지위’를 능력 있는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혁명은 반드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 ‘능력에 기초한 공정분배’를 추구하는 혁명적 개혁이야말로 다산의 최종 견해였다.

조선 후기 적어도 상당수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인민대중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혹은 학연(서원 등의 학통)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원을 분배받기를 기대했다. 이를 두고 필자는 감히 ‘한국 능력주의의 뿌리’라고 말하고자 한다. 물론 이때의 능력주의는 결과주의-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의미에서-와는 다르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에 도달하려는 태도는 전혀 아니다. 적어도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덕성 즉 ‘구덕(九德)’의 수양을 전제한 능력주의였다. 이를 무엇이라 부르든 ‘공평한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은 현대 우리 삶의 오래된 관성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호

역사학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 의료사 연구와 더불어 조선사회의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 등에 관심을 갖고 통치의 제도화, 정치의 윤리 등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에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지점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조의 법치』,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100년 전 살인사건』 등이 있다.

다산이 보기에 18세기 후반 조선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는 데도 너무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능력’이 없는 데도 귀한 자리를 독차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었다. 일부가 지나치게 많은 부와 귀를 갖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해를 입을 뿐이었다. 다산은 능력에 따른 ‘부와 귀의 공정한 분배’야말로 조선 후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동체가 공생하는 방법은 오직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부와 귀’의 분배에 달려 있었다.

부의 재분배는 '세금과 부역'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했다. 다산은 조선 후기에 이른 바 대동법으로 대표되는, 토지에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세원을 파악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다산은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과 가축, 어장(漁場)과 염전 등 다양한 소유물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산은 조선 후기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이야말로 국가 몰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간주했다. 그는 노력한 만큼 가지는 대신 소유한 것에 대해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의 모든 부를 '균분'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 부민들에게 공동체의 공생과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이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 부의 편중 현상과 더불어 일부의 관직 독점은 더욱 문제였다. 많은 이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걸맞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의 낙담과 한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실망한 이들이 천주교 등 서학에 몰두하여 전통적인 가치에서 멀어진다는 정조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었다. 다산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들을 널리 뽑아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산은 <홍범(洪範)>의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른바 재능있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봉록을 주어야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능력이 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결국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들지 않을 터였다. 열심히 일한 자, 그 결과 공적이 많은 자는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더욱 힘을 내어 일할 것이다. 이것이 다산의 '공정한 보상'이요 '공평한 사회'였다.

문제는 조선 후기 현실이었다. 다산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사회는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아닌 데가 없었다. 특히 자신의 '노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분배[自食其功]'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산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두 가지가 있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와 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이다. 부는 소인들이 좋아하고, 귀는 군자들이 추구한다. 특히 귀는 관직의 분배를 의미했다. 관직을 나누는 데 편당의 마음을 먹고 공평하지 않게 나누면 군자들이 원망하고, 부의 분배가 일부에게 집중되면 소인들이 울분한다. 역사의 치란(治亂)이 모두 여기에서 결정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맹자의 말을 인용한 다산은, 차라리 왕과 함께 이 나라가 망했으면 하고 백성들이 바라는 '순간'이 도래한다고 강조했다.

다산은 '올바른 능력주의'를 주장했다. 올바른 능력주의는 태생적인 사회적 지위와 자원의 세습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능력주의=귀족주의-특권 세습'이다. 이미 조선은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근대'에 바짝 다가서 있었다. 특히 우리가 칭송해 마지않는 다산이야말로 능력주의를 맹신했다. '능력주의를 강조한 실학자'의 생각을 노골적인 신분제보다도 더 위협하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욕구 역시 다산의 생각과 멀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주의야말로 공평하다는 이 '오래된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진보적인 유교'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시  
2022년 4월 11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 드립니다.